

2008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1차 정례협의회

◎ 일 시. 2008년 5월 9일(금) 13:00

◎ 장 소. 민주노총 9층 교육원 강당

순 서

▶ 순 서

□ 인 사

-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

□ 논의 사항

- 민주노동당 5월 사업계획(안)
- 민주노동당 혁신과 재창당 방안
- 민주노총 6월말~7월초 총력투쟁 계획(안)
- 민주노총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 계획(안)

....

□ 토론

▶ 논의 사항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5월 사업계획(안) [p1 - p17]
- 민주노동당 혁신과 재창당방안 토론회 자료집 [p38 - p61]

.....

□ 민주노총

- 6월말~7월초 총력투쟁 계획(안) [p18 - p30]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 계획(안) [p31 - p37]

....

논의사항 1. 민주노동당 5월 사업계획(안)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5월 사업계획(초)

I. 여론동향

1. 정당지지율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D)

| 당파조사일자 | 08.03.10 | 08.03.25 | 08.04.24 |
|--------------|------------|------------|------------|
| 한나라당 | 43.5 | 39.7 | 41.5 |
| 통합민주당 | 12.4 | 18.1 | 13.6 |
| 민주노동당 | 2.4 | 1.6 | 3.6 |
| 자유선진당 | 2.6 | 2.0 | 3.0 |
| 창조한국당 | 1.0 | 1.9 | 1.8 |
| 친박연대 | - | 4.4 | 5.7 |
| 진보신당 | - | 0.1 | 2.7 |

- 서울지역 한나라당 27.0%→36.9%로 큰 폭 상승, 민주당 26.2%→11.7% 큰 폭 하락
- 충청지역에서 자유선진당(13.5%), 통합민주당(18.9%) 상승
- TK지역에서 친박연대 지지도 8.8%→12.0%로 상승
- PK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율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기록

| (단위:%) | 한나라당 | 통합 민주당 | 민주 노동당 | 자유 선진당 | 창조 한국당 | 친박연대 | 진보신당 |
|-------------------|-------------|-------------|------------|------------|------------|------------|------------|
| 총선득표율(4/9) | 37.5 | 25.2 | 5.7 | 6.8 | 3.8 | 13.2 | 2.9 |
| 정당지지도(4/22) | 41.5 | 13.6 | 3.6 | 3.0 | 1.8 | 5.7 | 2.7 |
| 정당지지도(재계산) | 55.8 | 18.3 | 4.9 | 4.0 | 2.5 | 7.7 | 3.6 |

**정당지지도(재계산)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고 4/22 정당지지도의 합을 100으로 환산한 것임.

- 총선득표율에 비해 상승한 정당은 한나라당, 진보신당 두곳. 한나라당이 다시 과반이상의 지지율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CBS-리얼미터

| | 08.04.09 | 08.04.15~16 | 08.04.22~23 |
|--------------|------------|-------------|-------------|
| 한나라당 | 45.8 | 37.7 | 40.5 |
| 통합민주당 | 18.3 | 20.6 | 15.6 |
| 민주노동당 | 5.1 | 8.0 | 7.0 |
| 자유선진당 | 7.4 | 7.0 | 5.5 |
| 창조한국당 | 6.2 | 3.3 | 4.7 |
| 친박연대 | 8.6 | 10.5 | 12.4 |
| 진보신당 | 4.0 | 4.9 | 4.1 |
| 기타/없음 | 4.6 | 8.0 | 10.1 |

- 여의도연구소의 4/24일자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37.8%를 기록

□ 정당지지율의 특징

- 한나라당은 총선을 거치며 하락한 정당지지율을 다시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다시 부자내각 파동에 휩싸인 최근 여론조사를 반영한 결과 등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 통합민주당의 지지율 폭락이 두드러짐. 총선 종반 견제론의 상승효과를 일정 흡수하였으나, 총선이 후 비례대표 정국교 구속/야성상실 논란 등을 통해 지지층 분열. 지속적인 하락세로 나타날 가능성 높음.
- 반면, 역시 비례대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친박연대의 경우에는 정당지지율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복당에 대한 우세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박근혜의 영향력.
- 민주노동당은 총선 이후 소폭상승하고 있으며, 20대와 경남지역에서의 지지가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됨.
- 주목할 만한 점은 진보신당의 지지율.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원외정당/신생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총선이후 보다 높은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음. 30대, 수도권의 지지율이 높으며, 지속적인 언론노출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

2. 여론동향

□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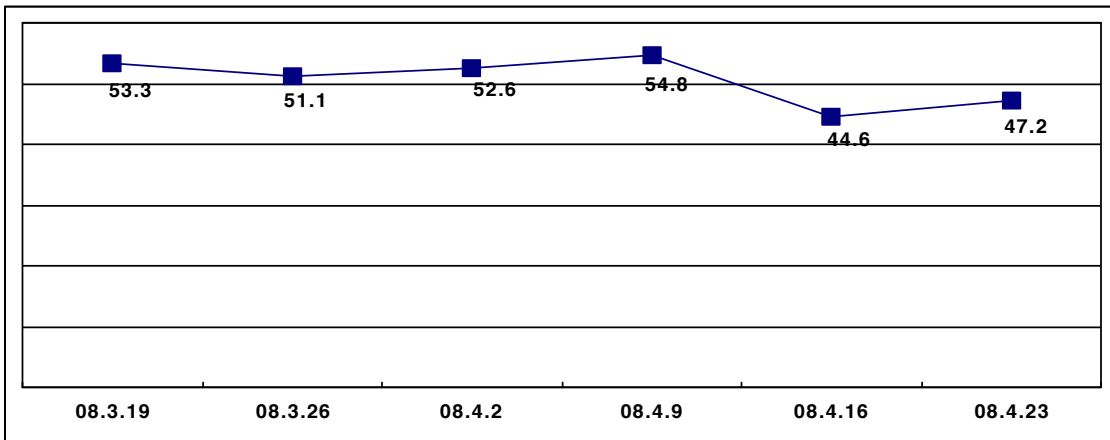
| | | | |
|-------|-------------------|-----------------------|--------|
| | 17대 국회보다 나아질 것 | 17대 국회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 | 모름/무응답 |
| 비율(%) | 43.3 | 42.9 | 13.1 |

cf.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 | | | | |
|----------------------------|--------------------|-------------------|-------------------|--------|
| 단위:% | 이전 국회보다 잘 할 것이다 | 이전 국회와 비슷할 것이다 | 이전 국회보다 못할 것이다 | 모름/무응답 |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04.4.24~25) | 74.1 | 20.1 | 3.4 | 2.4 |
| KSOI (04.6.8) | 51.6 | 40.7 | 5.2 | 2.5 |

- 18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17대 국회 7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절반 이하.

□ 이명박 국정지지도



- 4/24일 여의도 연구소 조사 국정지지도 61.3%(3/2) → 50.1(4/24)로 하락
- KSOI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때, 긍정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증가
부정 18.9% / 모름.무응답 38.9% (3/10) ▶ 부정31.7% / 모름.무응답 23.3% (4/22)
비슷한 시기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72.7%

□ '친박복당' 여론 팽팽

| | | | |
|----|-----------|------------|-------------|
| | 4/11 리얼미터 | 4/21 비전코리아 | 4/24 여의도연구소 |
| 찬성 | 37.5 | 57.2 | 44.5 |
| 반대 | 49.0 | 18.6 | 45.5 |

- 4/24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자의 56.0%가 복당찬성

□ '뉴타운 공약' 부정여론 증폭

| | | |
|----------|----------------|-----------|
| | 4/18 리얼미터 (서울) | 4/24 KSOI |
| 문제가 있다 | 74.0 | 58.9 |
| 별 문제가 없다 | 23.0 | 23.8 |
| 모름/무응답 | 3.0 | 17.2 |

- KSOI조사에서도 특히 수도권(60%)과 서울지역(67.6%)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남.
반면, 뉴타운 이슈가 있는 곳에서는 야당 강세지역에서도 여당이 승리.

□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 못한 '한미정상회담 평가'

| | | |
|---------|-----------------------|-----------------------------|
| | 03. 5 (노무현-부시) | 08.4 (이명박-부시) |
| 긍정평가 | 54.6% (한겨레, 04.05.23) | 33.7% (KSOI, 부정평가 51.9%) |
| | 55.7% (동아, 04.05.25) | |
| 국정운영지지도 | 48.4% | 45.0% |

- 주한미군 감축 금지,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의 격상, 무비자 미국방문 연내 허용 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외파병 확대 등 우리나라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인식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부정평가 71.0%로 압도적

| | | |
|------------------|-----------------|-------------|
| 잘못된 일이다 71.0% | 잘된 일이다 26.5% | 무응답 3.6% |
|------------------|-----------------|-------------|

- 06.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부대상, '구입하지 않겠다' 70.4%
- 06.12 여의도리서치 :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68.2% '찬성' 21.9%
- 07. 4 YTN : 한미FTA 타결로 싸 질 경우, '구입의향 있다' 52.7% (협상타결 직후)
- 07. 4 KSOI : 美,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반대' 49.2% '찬성' 48.7% (협상타결 직후)

□ 기타 여론조사

① 한반도 대운하

- 4/13 (SBS-중앙일보) : 찬성 23.5% / 반대 66.6%
- 4/14 (내일신문) : 찬성 27.4% / 반대 62.8%

② 학교자율화

- 4/18 (CBS-리얼미터) : 찬성 34.0% / 반대 42.4%

③ 문제의 비례대표 의원 거취

- 4/25 (CBS-리얼미터) : 사퇴해야 62.8% / 사법처리 확정까지 사퇴할 필요 없다 25.1%

④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 4/22 (KSOI) : 봐주기 수사로 불만족 61.3% / 철저히 규명수사 만족 30.9%

⑤ 한미FTA 비준 여론

- 4/24 (여의도연구소) : 비준필요성 찬성 42.8% / 반대 31.9% ▶ 17대 처리 37.6% / 18대 처리 41.2%

□ 각 당 지지층의 차기 당권 선거 여론

▶ 한나라당

| | | | | | | |
|------|------|------|-----|-----|-----|-----|
| 박근혜 | 정몽준 | 강재섭 | 원희룡 | 안상수 | 김형오 | 홍준표 |
| 56.4 | 22.3 | 12.8 | 2.6 | 1.1 | 0.3 | 0.2 |

▶ 통합민주당

| | | | | | | |
|------|------|------|-----|-----|-----|-----|
| 추미애 | 박상천 | 천정배 | 정세균 | 김호석 | 문희상 | 박주선 |
| 21.7 | 18.7 | 10.5 | 7.3 | 2.9 | 2.1 | 0.5 |

- 4/18 CBS-리얼미터, 각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

- 한나라당의 경우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박근혜 지지가 높아, 다른 친박계열 후보나 박근혜-연대세력 후보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민주당은 기타 인물 지적인 응답자 16.3%, 당 대표에 대한 지지층의 의견차가 분분.

II. 당의 현황

1. 당 내부의 역동성 상실되어 가고 있음.

- 민생대장징에도 불구하고 당직선거 연기 이후 전반적인 조직 이완
- 당직체계 개편, 원내 포지셔닝, 정치전략 등 시급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당원을 발동할 계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며, 좌표설정이 되어 있지 못함.
- 당 내부에 ‘3당’ → ‘5당’이라는 현실과 당의 역량 사이에 괴리감 존재.
- 냄비처럼 식어버린 강기갑 돌풍. (vs 진보신당의 내부활력과 지지율 상승)
- 당 혁신에 대한 내외의 관심정도가 미미함.

2. 더욱 열악해지는 대외적 환경

- 오피니언, 언론, 정책 등 ‘3不정당’의 장기화 우려. 네트워크의 복원 시급.
- 언론의 노출빈도 급감 및 TV토론 배제 등에 대한 무기력함.
- 오피니언과 언론에서 나타나는 민주노동당 ‘배제’ 경향은 조직적이라기 보다는 즉각적이며, 편파적이라기 보다는 경향적임.
- 총선 이후에도 중북주의, 낡은 진보의 이미지 여전히 지속.

3. 이명박 정부에 대한 스크린 및 대응체계 미흡

- 신자유주의 폐달에 가속을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스크린조차 쉽지 않은 조건
- 전략의제와 논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 ‘정책대응’ 및 ‘연대대응’ 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나는 현상
- 강기갑의원 단식, 야3당 공조 등 미국산 쇠고기 대응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원내전략 및 추진 동력 확보가 부족한 실정.
- 네트워크 이완에 따라 정보력도 감쇄.

4. 18대 국회 준비에 대한 긴장감 부족

- 원내 첫 진출을 이룬 17대와 다르지만, 비교하여 18대 원내준비 열기 부족.

- 18대 원내전략과 관련한 당 내부의 토론이 있었지만, 원론적 수준. 내부의 관심 하락
- 외부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관심’이 사라진 상황.
- 개원준비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획부족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 못함.
- 예를들어, 입법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대응이 시급함에도 논의 부족.

5. 내부적인 전략 구호는 ‘열정의 복원’

- 당 내부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부심의 발동. 나의 대표, 나의 투표, 나의 지지가 임금 100만원 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며, 그에 대한 자부심이 발동이 필수.
- 민주노동당 브랜드의 변화, 투자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 강기갑 의원에 대한 연구 및 정치유형 전파/당선자 이슈메이커로 부각하기 위한 기획.
- ▶ 민생전략의제 제시 / 당원이 참여 가능한 생활아젠다 개발 제시

6. 2010년은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건 승부처

- 민주노동당 10년 결산의 해로 2010년을 상징.
-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자, 2012년을 대선/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승부처임.
- 보수정당과의 경쟁은 물론, 개혁/진보정당과의 경쟁에서도 1차적 승부가 가름되는 시점임. 따라서 당을 전체적으로 2010년을 겨냥한 체계로 재편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함.
- ▶ 의원단-지방의원-지역조직-배타적지지단체(산별노조, 농민회)-연대단체(시민단체, 중소기업 등)-개인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 ‘(가칭) 2010 진보공동체 위원회’ 등 구성.
- ▶ 창원, 사천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밀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함.
- ▶ 조사 및 연구, 공동의제 개발. ‘지역바꾸기 아이디어’ 모집 방식 등 제안.

7. 주도전략(strategic initiatives)과 블루오션 전략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와 같이 성공을 통해 나머지 의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핵심적 의제를 찾아내어 집중하는 주도전략이 필요함. 이는 지역정치활동, 지방의회를 통해서 현실화 시켜나가야 함.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지금부터 의제를 선정하고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정치활동 외에도 이슈, 부문 등에서의 주도전략 필요.

- 진보진영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막연한 외연과 가치의 확대가 아니라 이슈와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가치의 확대가 외연의 확대를 불러 온다는 점에서 어느 집단이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의제합치성 필요.
- 특히 오피니언 그룹에 대한 블루오션 전략이 시급함. 민주노동당의 지지에서 이탈한 오피니언 그룹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오피니언, 민주당 성향의 오피니언이면서 중도적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형성이 필요함.

▶ 54%의 투표기권층 /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 비정규직 교수노조 / 자영업자

Ⅲ. 사업기조

1. 전략기조 - 『민생과 혁신, 범국민 쉼기조직』

- 1)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으로 일점 돌파
- 2) 18대 첫 민생 입법과제 선정 후 원내-원외 체제 가동 /민생대장정 지속
- 3) 전당적 혁신 토론과 당직선거 준비
- 4) 오피니언, 정책, 언론 네트워크 복원

2.사업과제 및 현안대응

- 1)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 범국민 쉼기 조직
- 2) 당 대회 준비를 위한 혁신안 마련 및 전당토론
- 3) 5월 임시국회 대응 (한미FTA 비준 등)
- 4) 18대 국회 개원준비 및 원내총괄계획 수립
 - 17대 의정활동 평가 및 18대 의정활동 방향 토론회
 - 원내총괄계획 수립을 위한 직제 정비 및 원칙 수립,
 - 초선의원연수, 의원-보좌진 전체연수, 정책 네트워킹 사업
- 5) 민생해결을 위한 전당 실천 및 이슈화
 - 18대 첫 민생입법 0대 과제 ① 등록금 상한제 ② 대형마트 규제 ③ 경제-중소기업 ④ 의료민영화 저지, 국민건강권 지키기 ⑤ 기타 17대 미실현 과제 등
- 6) 6.4 재보궐선거 전략적 대응
- 7) 계기별 사업
 - 5.18광주민주화운동
 - 6.10항쟁기념
 - 6.15남북공동선언

IV. 세부사업계획

1. 집중사업

□ 미국산 쇠고기 무효화 선언 전국민 행동 조직 (가안)

1. 현황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협상타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집결되고 있는 양상. 4/29일 MBC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을 취재한 내용이 방송된 이후 이를 기폭제로 여론 폭발함.
- 온라인 상에서의 양상은 '사이버 민란'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열기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온라인 탄핵 서명이 하루 20만명, 총 50여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5/2일, 5/3일에는 촛불집회 등 오프라인 행동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음.
** 청와대 홈페이지 및 농해수위 의원들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 야당인 통합민주당에게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장 개설, 하루만에 서명목표 136,000명을 넘겨 148,956명의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 그러자 다시 10만명을 목표로 군대 쇠고기 배식금지 청원을 진행 중이며 이 청원도 3만명을 넘기고 있으며, 또 이 외에도 쇠고기 관련 청원 서명장은 생기는 족족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 강기갑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게시판 글 1600여개가 게재되는 등 하루 3만명 이상이 방문, 접속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쇠고기 수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음.
- 참여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생들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포와 집권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대한 국민불안과 비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양상.
-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따라 야3당(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회담이 2차례 진행되었으며, 농해수위 상임 차원의 청문회가 5/7일 개최될 예정.
- 한편, 이와는 별개로 한미FTA청문회가 통외통위에서 5/13~14일에 열리고 나면, 한미FTA 비준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2일,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제공한 68개 단체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미FTA범국본 등을 포함하여 25곳을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선정.

2. 사업기조

-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전면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전당적 역량을 집결
-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고리로 한미FTA 비준 저지 여론 형성
-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폭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전개
- 쇠고기 협상 무효화 전면에 나섬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낙인한 이명박 정부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야당으로 이미지화
- 원내와 원외를 결합시키는 범국민적 대중운동으로 확산

3. 사업방향

『강기갑을 이슈메이커로, 쇠고기 협상 무효화 실현,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 쇠고기 협상 무효화 가장 전면에 나서 있는 강기갑 의원을 범국민 운동의 이슈메이커로 내세워,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거리의 대통령’으로 부각. 다른 17,18대 의원 및 당 지도부들을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배치.
- 원내에서는 청문회, 결의안, 특별법 등을 통해 압박하고, 원외에서는 대중운동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 쇠고기 협상을 철회시킬 강력한 야당은 민주노동당 뿐이라는 점을 강조. 5석뿐인 민주노동당에게 국민적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

4. 사업계획

1)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행동 호소문 발표

- 일시 : 5월2일(금) 오후1시
- 장소 : 국회 본청앞 계단
- 참여 : 강기갑 의원을 포함한 당지도부 및 의원 전원, 사무처장단, 중앙당, 의원실, 서울시당 등
- 내용 : 5/1일자로 수입되기 시작한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불매를 위한 범국민 행동계획 및 서명운동 호소

2)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문화제 및 촛불집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수입 안돼 - 토요일문화제

- 일시 : 5월3일(토) 오후5시
- 장소 : 보신각
- 주최 :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국민 감시단

- 제목 : '미친 소 너나 처 먹어라' 문화제
- 일시 : 5/2(금) 19:00~22:00
- 장소 : 청계천 소라광장
- 주최 : 2MB탄핵투쟁연대(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제목 : 미친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촛불행사
- 일시 : 5월 3일(토) 오후7시
- 장소 : 청계청 소라광장
- 주최 : 정책반대시위연대

- ▶ 별도의 발언이 없더라도 강기갑 의원 및 당 지도부 참여 (5/3 문화제, 촛불행사)
- ▶ 각 시도당 및 지역위 차원에서 동시다발 개최

3) 어린이날 '광우병 쇠고기가 싫어요' 캠페인

- 일시 : 5/5(월)
-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국민 캠페인, 기자회견 등 개최
-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에 대통령에게 엽서쓰기 등 진행
- 당 지도부 어린이 날 행사 참여

4) 쇠고기 협상 청문회 및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 5/7(수) 농해수위 청문회
- 5/8(목)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 강기갑 의원
- 전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시점.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국민건강권에 대한 문제제기, 사후대책 미비에 대한 질타. (강기갑의원이 활약) → 전면 무효화 선언 압박

5) 결의안 및 특별법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5월9일(금)

- 방식 : 야당공조, 기자회견
-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제출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결의안 제출
- '미 쇠고기 수입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출
 - 한미 FTA의 경우 이는 명백한 국제조약이므로 이에 반하는 입법을 하기가 어렵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제법적인 강제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

5) 강기갑 의원 전국순회-걷기시위 돌입

- 제목 :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국민건강권 지키기 '강기갑의 걷기시위'
- 일시 : 5월9일(금) 시작 ~
- 코스 : 전국순회 형식
- 내용 : 국회를 떠나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알려내기 위한 고행 돌입. 이명박 정부가 무효화를 선언하고 사과할 때까지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겠다.
- 방식 :
 - 각 지역마다 걷기 코스를 정하고 강기갑 의원의 '나홀로 행군'으로 시작
 - 각 지역에서는 강기갑 의원의 걷기시위에 참여 조직 - 일반참가자, 어린이/학부모 등
 - 지역에서 개최하는 촛불집회 참석, 대국민 캠페인 결합 등 기획사업 결합
 - 참가자수를 점점 늘려가는 방식
 - 한미FTA 처리 등과 무관하게 걷기시위 지속 (거리의 대통령, 거리의 국회의원)

6) 홍보차량 및 홍보단 조직

- 일시 : 강기갑의원의 걷기시위와 동시에 시작 (걷기시위를 수도권에서 엄호)
- 순회지역 : 수도권 중심
- 방식 :
 - '미친소, 2MB 너나 드세요' 등 문구와 홍보그림 결합 (식객-허영만 등 요청)한 버스1대
 - 플래시 몹 등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홍보단 구성
 - 매일 날짜마다 의미있는 인사들이 버스에 탑승 → 대국민 호소 캠페인
 - 일일 기획

7) 토요 시민문화제 (매주 토요일)

- 일시 : 5월10일(토) 오후5시
- 장소 : 보신각
- 주최 :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국민 감시단

8)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화' 연등행사

- 일시 : 5월12일(화)
- 장소 : 광화문 및 각 지역 동시다발
- 내용 :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에 맞추어 협상 무효화 캠페인 전개

9) 1천명 3보1배 행사

- 일시 : 5월17일(토) 오후2시
- 장소 : 광주
- 참여 :
 - 강기갑 의원 등 의원단/당지도부 전원, 5.18 참가자 등
 - 유명인들의 참여 유도 → 사전 홍보 및 조직사업

□ 기타 사업

-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이명박 사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 『마스크 시위』 - 'MB, 너나 먹어라' 쓰여진 마스크 쓰고 시위, 촛불집회 등과 결합
- 광우병 감시단 활동 - 5/13일 롯데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캠페인
- 정부에 쇠고기 전량 매입 및 처분 촉구 - 쇠고기 불태우기 행사 등
- 『스티커 붙이기』 - 집앞, 사무실 등에 '광우병 쇠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 다음 아고라에 '민주노동당과 강기갑을 살려야 광우병 막는다' 이슈청원
- 스승의 날 - 교사선언 등 어린이/학부모/군인자녀부모 등 연쇄선언
- 군대 급식소 및 학교 급식소 방문

*** 상황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고 18대가 개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개 고려.

2. 기타 사업계획

- 혁신안 마련 및 전당 토론 계획 (별첨자료)

- 5/18(일) 혁신안 마련
- 5/16(월) ~ 6/15(일) 전당토론
- 6/14(토) 중앙위원회
- 6/22(일) 임시당대회
- 7/14(월)~18(금) 지도부 선거

□ **18대 국회 개원준비** (별첨자료)

1)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계획 (현안토론회 3회 개최)**

- 『위기일발! 건강보험 문제와 해법』 보건의료: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전국보건의료노조
- 『위기일발! 교육정책 문제와 해법』 교육: 학교자율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 『위기일발! 사회공공성 문제와 해법』 공공: 사회 공공성, 공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우조선노조

2) **초선연수 및 전체연수 계획**

- 초선의원 연수 4회 개최

3) **18대 의정활동 토론회**

- 일시: 5월 8일 14시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 프로그램 (발제 20분, 토론 각 10분)
 - 사회.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 발제1. “민주노동당 18대 의정활동의 기초와 방향” (최순영 개원준비단장)
 - 토론1.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토론2. 전농 정치위원장
 - 토론3. 학계 1인(조희연, 강원택, 김민전 교수 등)
 - 토론4. 언론계 1인(성한용 기자, 손석춘 원장 등)
 - 토론5. 17대 의원 1인(임종인 의원, 민주당 개혁파 의원 등)
 - 토론6. 참여연대 관계자 1인

□ 6.4 재보궐 선거 현황 및 대응기조 (별첨자료)

□ 민생사업 (별첨자료)

- 1) 등록금 투쟁 일정
- 2) 119 민생사업 과제

□ 5월 임시국회 대응방안 (별첨자료)

□ 기타 사업

1) 'MB스크린 팀' 구성

- 목적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폭주 정책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대응
- 구성 : 당내 기획팀, 정책팀, 대변인실, 상황실로 구성
- 대응 : 입장 브리핑, 정책분석 및 정책논평, 관련 현장 기동대응, 연대단체 공동대응 조직
- 방식 : 주간단위 'MB폭주지수' 발표
- 확대 : 1) 민주노총, 전농, 진보연대 등과 공동 스크린팀 구성 or 진보진영 망라하여 구성 2) 전문가 집단을 스크린에 연계

2) 내부결속 사업

- 당원 메시지 전달
 - 당 지도부 및 18대 의원단 편지글과 메시지 전달
 -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당원들에게 배포
 - 이후 전당원 만나기 실천사업과 결합
- 배타적 지지단체(진보진영)와의 산행
 - 일정 : 5월 12일(월) 경
 - 장소 : 북한산
 - 참가 : 당, 배타적 지지단체, 진보진영 지도부 및 상근자

| 일 | 이 | 화 | 수 | 목 | 금 | 토 |
|--------------|---|-------------------------|--|--|---|---|
| 4/27 | 28 | 29 | 30 19:00 노동절문화제(상암) 민생대장정(경기/충남) | 5/1 [메이데이] 15:00 118주년노동절(대학로) | 2 09:00 초선연수(1) 13:00 상근자토론회 19:30 성소수자2차전체모임 민생대장정(경북) | 3 |
| 4 | 5 [어린이날] | 6 10:00임시국회본회의(통외통위) | 7 11:00 쇠고기 청문회 | 8 [어버이날] 대정부질의(강기갑) 11:00 등록금거품빼기기자회견 -등록금넷, 느티나무 14:00 의정활동2차토론회(국회) 대형마트카드깡기자회견 | 9 10:00 비교섭단체정당대표연설 | 10 [교사의날] |
| 11 | 12 [석가탄신일] | 13 10:00 통외통위-FTA청문회 | 14 10:00 통외통위-FTA청문회 | 15 [스승의날] | 16 10:00 임시국회 본회의 | 17 [국제등성애혐오반대의날] 성소수자위-무지개행동발족식 |
| 18 [광주민중화운동] | 19 11:00 등록금이명박면담요청 등록금 노상농성 (~30일) | 20 | 21 등록금정책입법화서약→ | 22 10:00 임시국회 본회의 | 23 10:00 임시국회 본회의 대형마트 전국대책위구성 | 24 성소수자 정치스쿨 (~25일) |
| 25 | 26 의원단연수(~28일) | 27 | 28 고리사채반환대표소송 | 29 | 30 민생본부전국담당자회의 | 31 ★등록금해결2차 범국민대회 등록금피해사례증언대회 |

- 내용 : 굳건한 지지연대 확인, 민생투쟁 결의 등

논의사항 2. 민주노총 6월말~7월초 총력투쟁 계획(안)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 계획(안)

<민주노총 6월말7초 총력투쟁 계획안>

1. 주객관 상황

-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인상, 사교육비, 의료공공성 축소, 식량주권(쇠고기)과 국민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둘러싸고 급속한 민심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주택)과 금융 등 불안요소 심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에 돌입하면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투쟁전선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큼.
- 6월 국회는 개원국회라는 점에서 원구성 등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6월 하순정도부터 본격적인 법안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 ‘물사유화입법’, ‘국립대법인화법’ 등 각종 개악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4월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쉽지 않은 한미FTA 국회비준 문제와 재벌을 위한 규제철폐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임. 이와 더불어 자발적 국민반대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쇠고기문제에 대한 재협상이나 특별법,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국회 공방이 구체화되면서, 이명박정권 정책 전반에 대한 원외 대중투쟁 확산의 중요한 계기로 될 가능성 존재.
-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총 6월말7초 총력투쟁 성사는 이명박정권의 반민중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노동계급의 선도적 투쟁이자,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국민비판여론을 모아내어 하반기로 이어지는 법제도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정치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지렛대로 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각종의 의제의 집중과 이를 쟁취할 수 있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대중적으로 입증해내야 함
- 객관정세와 결합하여 조합원들속에 투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정책의 저지와 민주노총 요구쟁취를 위한 총단결투쟁의 절박성에 스펙트럼의 다양함, 총연맹과 산별연맹 단위사업장간의 통일된 논의와 소통구조의 취약함 등 다양한 조직별 내부상황 등이 결합되어 적극적 투쟁동력으로 조직화되고 있지 못함.
- 이러한 주객관 상황하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및 구조조정계획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메가톤급 폭격도 예상되므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공공부문 대오 중에서 조기투쟁에 돌입할 단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객관상황 참조 - 예고되어 있는 5~6월 정부 공세>

| 영역 | 정부 공세(상반기) |
|-------|--|
| 사유화 | • 민영화계획발표(6월말) • 물산업진흥법안발의(6월) • 국립대법인화(6월) |
| 연금 | • 국민연금법개약안 발의(6월) • 공무원연금법개약안 발의(6월) |
| 채벌,세금 | • 금산분리철폐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법인세인하 |
| FTA | • 한미FTA 비준 추진(5월 국회) |
| 구조조정 |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청와대 최종 보고(5.19)->구조조정 실행 착수(6월초 예상) |

<주체상황 참조 - 각 연맹별 6월 7초 관련투쟁계획(5월 6일 현재 현황)>

| 연맹 | 내용 | |
|---------|---|----------|
| 건설산업연맹 | - 5월 27일 상집회의에서 세부 투쟁일정및 계획 논의 - 6월 4일~5일 확산수련회에서 투쟁계획 확정 | |
| 공공운수연맹 | <공공노조> - 6/18~27 조정신청 - 6/30~7/9 쟁의행위 찬반투표 <연맹> - 5/24 공공부문 총력결의대회(5,000명) - 6/30 대정부 투쟁기자회견및 간부결의대회 - 7/1~7월5일 집중기간 (의제별 결의대회) 7/5-조합합원 파업(총회)집회 | 변경될 수 있음 |
| 공무원노조 | - 5/24 공공부문 총력결의대회(2,000명) -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6/28일 공무원 제1차 총궐기 투쟁 | |
| 금속노조 | - 5월말 6월초 산별중앙교섭 쟁점을 위한 기획투쟁 - 6/17 조정신청 - 6/24~25 쟁의행위 찬반투표 | |
| 병원노련 | - 5/22~24 간부상경투쟁(매일 300명 이상) - 6/26 보건 총력투쟁 결의대회(2,000명) - 6/30 조정신청 / 7/15 산별파업 전야제 | |
| 비정규교수노조 | * 교원지위법 입법 투쟁 | |
| 사무금융연맹 | - 5~6월 투쟁 조직화및 6말7초 총력투쟁 논의 중 | |
| 서비스연맹 | - 7월초 전체 집중 투쟁 논의 중 | |
| 시설노련 | - 6월 중순 조정신청 - 6월말 7월초 쟁의행위 찬반투표 | |
| 언론노련 | - 5월 산별중앙교섭 - 6월 지역별 교섭 - 6/27 조정신청 - 7월초 쟁의행위 찬반투표 - 7/10~ 11 임시대의원대회 | |
| 여성연맹 | - 6월 말 최저임금인상투쟁과 연동하여 집중투쟁 | |

| | |
|--------|---|
| 전 교 조 | - 5/13 단위학교(분회) 프랭카드 걸기 진행 - 5/7,17 공교육포기,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17일 최대집중) - 5/24 교사대회(20,000명) - 6/28 공무원 1차 총궐기 투쟁 - 6월11~6월30일 '온나라 걷기대회' - 6말7초 집중 투쟁계획 논의 중 |
| 화학섬유연맹 | - 6월 중순부터 투쟁 관련한 전 조합원 교육 진행 |
| IT연맹 | - 사이버 투쟁을 통한 대국민 선전전 투쟁계획 논의 중 |

※ 교수노조, 대학노조 논의 중

2. 6말7초 총력투쟁의 의미

- ①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민중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노동계급의 선도적 투쟁
- ② 총체적으로 보수화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시발점
- ③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식 법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범사회적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시금석이자 출발점으로 되는 투쟁
- ④ 사안별, 조직별 분산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총단결 총투쟁기조와 조직적 결의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투쟁

3. 6말7초 총력투쟁 상과 기조

- ① 6말7초 총력투쟁을 주객관 정세에 입각하여 이명박정권에 대한 실질적 타격이 되는 강력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성사시켜냄.
- ②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투쟁, 조합원총회투쟁, 연가투쟁, 준법투쟁 등 조합원 결의에 입각한 실현가능한 최고수위의 가맹산하조직별로 투쟁전술을 확정하고 이를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모아냄.
- ③ 총력투쟁기간은 6월 25일(최저임금쟁취투쟁)에서 7월 5일까지로 하며, 1단계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민주노총 공동행동 주간으로 삼고 주요 의제별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2단계로 7월 3~5일을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으로 설정하여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중앙집중 총력투쟁을 전개함.
- ④ 조직내외 홍보선전사업을 총력투쟁의 관점에서 집중배치함으로써 조합원의 투쟁결의 고취와 국민적 지지와 우호적 여론을 구축해내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전선을 폭넓게 모아냄.
- ⑤ 6말7초 총력투쟁을 민주노총을 넘어 비정규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의제와 투쟁전술들을 마련함으로써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투쟁으로 되게 함
- ⑥ 투쟁은 조합원의 조직적 결의를 모아낼 수 있는 대중집회와 더불어 민주노총 의제알리기, 시민 신문고, 의제 쟁취 마라톤대회, 자선거 대행진, 야간 문화행사 등 최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방식을 적극 결합함.

4. 총력투쟁기간 상과 기본 계획

1) 총력투쟁기간

- 6월 25일(수) ~ 7월 5일(토)

| 민주노총 6말7초 총력투쟁 | | | |
|-------------------|--|-------------------|---|
| 1단계-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 | 2단계 -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 |
| 기간 | 방식 | 기간 | 방식 |
| 6월25일~7월2일 | 1일 1의제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산별연맹 주요의제) | 7월3일~7월5일 | 파업대오+ 총회투쟁대오+ 간 부대오 집중투쟁 (전국동시다발 집중투쟁 + 1박2일 상경투쟁) |

2) 총력투쟁기간 투쟁계획 (토론을 위한 예시)

[일정별 총력투쟁 개요]

| | | 집중의제 | 투쟁방식 | 주요동력 | 비고 |
|-------------|----------------|----------------------|--|--------------------------------------|---|
| 1 단 계 | 6.25(수) -확정 | 최저임금쟁취 | 1박2일 집중투쟁 (수도권+ 전국동다발) | 전간부+ 최임투쟁대 오 | 전국동시다발 지역 최저 임금위반사업장 집단고소 고발투쟁 결합 |
| | 6.26(목) -확정 | (오전-최저임금) 의료공공성 | 집회+ 국민홍보전 (서울집중) | 보건의료노조 조직동 력+@ | 보건의료노조 산별임단협 투쟁승리결의대회와 결합 |
| | 6.28(토) | 연금개약저지 | 연금투쟁단위 총력집중투 쟁 (서울집중) | 전교조+ 공무원+ 연 금관련노조+ 연금관 련시민사회단위 | 국민, 기초, 공무원 등 연금 문제 총괄요구 제기 |
| | | 비정규, 산별교섭 | 대규모집회투쟁 (수도권집중+ 전국동다발) | 금속, 보건 등 산별임 단투대오+ 비정규단 위 | 7.1비정규법 300인이하 적용/산별교섭 동향 |
| | | 쇠고기무효화/한미 FTA비준저지 | 대중집회+ 촛불 (수도권집중+ 동다발) | 민주노총+ 범국본+ 시민 | 범국본 등에 제안 |
| | | 교육공공성 | 조합원 공동행동의 날+ 대 중문화제 (전국동다발) | 전교조+ 보건의료노 조+ 교육, 보건관련시 민사회 | '전교조가정방문의날' |
| | | 기름(물가) 해결 | 전국화물노동자총궐기대 회+ 서울시내번호판 시위 (서울집중) | 운수노조+ 미조직 화 물노동자 | |

| | | | | | |
|-------------|----------------|----------------------------|-----------------------------|------------------|------------------------------|
| | |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저지 | 대규모집회+ 행진 (대회방식 추후판단) | 공공운수연맹+ 공공공투본 단위 | 시장화, 사유화정책 전반 규탄, 저지/국회법처리동향 |
| | | 노동기본권말살, 위헌적 필수유지업 무제도 폐지 | | | |
| 2 단 계 | 7.3~5 (목~토) |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 3일-전국동시다발 4~5일-1박2일 상경투쟁 | | |

(1) 1단계 -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① 기간

- 6월 25일(수)~7월 2일(수)

② 집중공동행동 주간 투쟁 기초

-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집중행동 주간 동안 1회 이상의 전조합원 총력집중투쟁(파업, 총회, 집회 등)전개
-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조건과 특성에 맞춰 해당조직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전술 최대한 구현

③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의제

-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기름값(물가) 해결
- 광우병쇠고기 및 한미FTA 저지
- 교육/의료공공성 강화
- 연금개악 저지
-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 쟁취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산별법제화

④ 주관, 주최

- 주최 : 집중공동행동 주간의 모든 투쟁과 사업은 민주노총 주최
- 주관 : 릴레이 집중공동행동 의제에 따라 산별연맹 주관단위를 둠

⑤ 의제별 집중공동행동 주간 투쟁계획안(예시)

※ 의제별 일정과 구체적 투쟁방식은 조직담당자회의와 산별대표자회의 등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함

● 6/25~26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안 쟁취 투쟁

▷ 대회방식

: 수도권 집중 / 전국동시다발

- : 1박2일 집중투쟁
- : 최저임금요구안 쟁취 대중투쟁과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집단고소고발투쟁 결합
 - ▷ 장소
- : 수도권, 최저임금위 앞
- : 지역, 노동부 앞
 - ▷ 주내용
- : 2008년 민주노총 요구안(월 994,840 최저임금) 쟁취
- :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 강화 등

● 6/26 의료공공성 강화

- ▷ 보건의료노조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와 연계, 추후 세부 논의

● 6/28 연금개악 저지

- 1안 - '공무원연금개악저지 1차 투쟁결의대회'로 정리
- 2안 -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전후하여 '노동자서민 노후생활 보장!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 실현!'을 주제로 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연계

● 비정규, 산별법제화

- ▷ 금속, 보건 등 산별임단투 진행단위와 논의하여 추후 구체화

● '한미쇠고기협상 무효화!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 ▷ 대회방식
- : 수도권집중 /전국동시다발
- : 범국분 등과 연대하는 공동행동(촛불대행진 등)
- : 민주노총 독자 대중행동전 결합
 - ▷ 장소
- : 수도권 - 청계광장(국회 상황에 따라 국회 앞)
- : 지역 - 대중거점
 - ▷ 주내용
- : 국민건강 팔아먹은 쇠고기 협상 무효화, 나라 통제로 팔아먹은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 : 미국쇠고기수입 관련 국회 상황에 따라 무효화특별법, 통상절차법 제정 결합
- : 취임2개월만에 국민건강 팔아먹은 이명박정권 규탄, 대국민사과, 재발방지약속, 협상책임자 농림부장관 퇴진

● 교육공공성 강화

- ▷ 공동행동 방식
- : 전교조 '공교육 살리기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전 교사 가정방문의 날' 등 전국동시다발 조합원 동시행동 전개
 - ▷ 구체 계획 추후 확정
- : 집회투쟁 등은 해당단위와 논의하여 결정

● '기름값폭등, 물가폭등 해결을 위한 전국 화물운송 노동자 총결기의 날(가)'

▷ 대회방식

- : 수만의 조직, 미조직 불문, 전국 화물노동자 서울 총집중 투쟁
- : 5월 중순, 관련 조직단위의 공동발의와 6월말까지 50일간 대대적 대중광고 등을 전개하여 미조직 화물노동자 대대적 조직화
- : ‘전국 화물운송 노동자 총궐기대회’ + 서울 전역 ‘화물 차량 번호판 시위’ + 귀향길 ‘운수노동자 생존권확보를 위한 도로 준법 투쟁’ 전개 등 사회적 긴장감과 파급력을 불러일으키는 입체적 투쟁 방식 구현

▷ 장소

- : 총궐기대회 - 시청일대
- : 화물차량 번호판 시위 - 서울 도심 곳곳

▷ 주내용

●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공공노동자 상경투쟁

▷ 대회방식

- : 중앙집중 목표
- : 파업대오 1일 상경투쟁, 총회상경투쟁, 교대제 조건 활용 등 상경투쟁 등 대규모 총력집중투쟁 성사

▷ 장소

- : 여의도 일대(국회 압박)

▷ 주내용

- : 물, 가스, 전기, 철도 등 사유화 저지
-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 : 향후 투쟁기조 선포

● 노동기본권 말살! 위험적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결의대회

- ▷ 당면 주요 투쟁현안인 산별연맹들과 논의하여 이후 구체화

● 6/25~7/5 IT연맹, ‘사이버 총력투쟁 주간’ 선포

▷ 주간활동 기초

- : 민주노총 6달7초 총력투쟁 의제에 대한 온라인 집중 홍보선전
- : 국민들에게 알리는 선전 활동(UCC/페러디 등 공모)을 추진

▷ 구체 계획 추후 확정

- : 총연맹 정보통신부, IT연맹, 진보진영 온라인홍보단위 등과 논의하여 “네티즌 페러디 공모” 등 대국민적 호응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계획 수립

(2) 2단계 -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① 일시

- 7월 3일(목) 14:00 ~ 7월 5일(금) 16:00

② 조직 목표

- 집중투쟁 기간 1회 이상 실천 결합 : 전 조합원
- 집중투쟁기간 대중집회, 및 상경투쟁 동력 : 조합원 10% 조직 목표
(파업대오 + 총회투쟁 대오 + 간부대오를 기본으로 조합원 최대 조직)

③ 기본 방식

- 7월 3일 : 전국동시다발 집중투쟁
- 7월 4일~5일 : 1박2일 서울집중투쟁

④ 3일간 집중투쟁계획

● 7월 3일,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력집중투쟁

<일시/장소>

- 일시 : 7월 3일 14:00
- 장소 : 지역 대중거점

<제목>

반노동반민중정권 이명박정권 규탄! 노동자민중생존권 및 사회공공성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주최 주관>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00지역본부

<모든 지역 공동 투쟁 기조>

- 교육, 의료, 식량, 물가, 주택(?) 국민 5대과제 실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와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친재벌정책저지와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 를 주내용으로 지역의제를 결합한 투쟁결의대회
-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 지역 출정식 결합
- 대회 당일을 전조합원 지역선전투쟁의 날로 정하여 투쟁결의대회와 결합('00지역 민주노총 대국민호소문 10만부 배포의 날' 등)

<지역별 투쟁계획>

- 5월 말까지 지역별 구체계획안 수립 취합

● 7월 4~5일, 1박2일 집중상경투쟁 계획안

<일시 / 장소>

- 일시 : 7월 4일 14:00~7월 5일 16:00
- 장소 : 국회, 청계광장 등

<주최 >

- 민주노총

<집중상경투쟁 전체 제목>

국민 5대과제(교육, 의료, 식량, 물가, 주택(?)) 실현!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와 저지와 사회공공성 쟁취!
 친재벌정책저지와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
 민주노총 1박2일 집중투쟁

<투쟁 기조>

- 집중과 산개방식의 투쟁을 결합하여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사회적 집중과 여론을 조성함
- 집중방식의 투쟁은 첫째날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가)’와 두 번째날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쟁 선포 및 하반기 노동자민중총궐기투쟁 선언대회(가)’의 기조로 함
- 산개방식의 투쟁은 서울 전역 산개 대시민 홍보선전투쟁과 연맹별로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고 요구전달투쟁 및 항의시위와 피켓팅 등 동시다발 집단 압박투쟁을 결합하여 실질적 압박과 여론선전효과를 최대화함

<1박2일 상경투쟁계획안>

- 아래 일정은 6월 개원국회가 7월 4일(금)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하는 일정안임. 국회 마감일이 7월 5일(토)이 될 경우, 투쟁일정이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7월 4일(개원국회 종결 예상) | | | 7월 5일 | | |
|-------------------|--|-------|-------------|--|------------|
| 시간 | 투쟁내용 | 장소 | 시간 | 투쟁내용 | 장소 |
| 14시 ~16시 | ‘보수정권, 보수국회 규탄 민주노총 총력 결의대회(가)’ | 국회 앞 | 07시 ~08시 | 기상, 세면 | 숙박장소 |
| 16시 ~18시 | 주요공공기관 앞 피켓팅(캠페인) 및 산별연맹별 요구 전달투쟁 | 산개 | 08시 ~09시 | 식사 | 산별연맹 별 |
| 19시~ 20시30분 | 식사, 휴식 | 산별연맹별 | 09시 ~12시 | 산별연맹별 결의대회 및 대국민 호소문 배포 | 대중밀집 거점 |
| 20시30분 ~23시 | 투쟁문화제 | 청계광장 | 12시 ~13시 | 점심식사 | |
| 23시30분 ~24시 | 숙박장소이동 (노숙) | 추후확정 | 14시 ~16시 | 이명박정권과의 전면투 쟁 선포 및 하반기 노 동자민중총궐기투쟁 선 언대회(가) | 청계광장 |
| | | | 16시 | 해산 | |

<지역별 투쟁계획>

- 산별연맹의 파업투쟁, 총회 투쟁 등 구체 전술에 따라 지역투쟁동력을 타산하여 구체계획을 제출함

- 기본적으로 상경하지 못하는 대오를 집중하여 지역총력투쟁을 동시다발로 개최하되, 숙박은 하지 않고 이틀 연속 투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제출함.

별첨1 - 민주노총 5~6월 주요 투쟁 일정표

※ 4월 17일 투쟁본부회의 결과가 반영된 주요투쟁 일정

총괄일정표

| 시기구분 | 총연맹 | | 산별연맹 |
|-----------------------|---|---|--|
| | 주요 사업 | 계기별 사업 | |
| 2단계 - 3(중)~4월 교섭및 조직화 | 3.20 투쟁계획초안 및 투본체계 결의 3/27-4/7 총선투쟁 집중 4/10 - 5/30 : 산별현장대장정+ 집중교육선전 | 총선투쟁 | 투쟁계획 확정 3.11. 공공투본 발족 교섭돌입 |
| 3단계 - 5~6월 대중행동전 | 5.1절 메이데이 5월 2째주 부처별 면담 5월24(토), 공공총력결의대회 6월, 계기별 투쟁 - 비정규철폐결의대회(6.14(토)) - 최저임금투쟁한마당(6/25-6) - 공무원연금개악저지결의대회(6/28) - FTA비준저지투쟁 결의대회 - 6.15 6주년 기념대회 | 대정부 교섭 추진 6월, 최저임금쟁취 투쟁 국회입법대응투쟁 FTA비준저지투쟁 | 집중산별교섭투쟁 집중조정신청및 쟁의찬반투표 산별 국회대응 |
| 4단계 - 6말~7초 총력투쟁기 | 민주노총 총력투쟁 전개 | | |

주요 사업일정표

| 날 짜 | 총연맹 | 가맹산하조직 | 비 고 |
|----------------|---|----------------|-------------------------------|
| 4/10~5/30 | 산별현장대장정 | | |
| 4/중순-5월 | 사회공공성 1만지킴이단 활동 개시 | | 전국동시다발 |
| 5/1 | 5.1절대회/ 제118주년 기념대회 | | 서울/ 동시다발 |
| 5/17~18 | 5.18정신계승 노동자대회 | | 광주 |
| 5월24(토) | 공공부문투쟁 결의대회 | | 서울/ 공공투본 |
| 6/초~6/말 | 대국회 입법쟁취투쟁 (연금법개정, 한미FTA, 민영화 등 개악저지 제출 및 쟁점화) | | FTA비준저지 투쟁 |
| 6/5,6/13, 6/20 | 최저임금투쟁 | | |
| 6월14(토) | 계기별 투쟁 | 비정규직철폐결의대회 | 민주노총 |
| 6월 25-26 | | 최저임금쟁취결의대회 | 민주노총 |
| 6월 28일 | |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결의대회 | 공무원노조 총집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
| 6/15 | 6.15민족통일대회 | | (미정) |
| 6/말-7/초 | 민주노총 총력투쟁 | | |

2008년 상반기 영역별 주요 일정표

| | 4월 | 5월 | 6월 | 7월 |
|--------|---|--|---|--------------|
| 주요사업 | - 4.8 총선 - 산별현장대장정 | - 5.1절 - 공공결의대회(5.24) - 차별철폐 대행진 | 18대 국회투쟁 최저임금, 비정규, 공공, 산별 등 의제별 집회 | 민주노총 총력투쟁 |
| 회의 | 사무처장회의(4/10(목)) 투본회의(4/17(목)) 공공국민연대 발족 | 사무처장회의(5/15(목)) 투본회의(5/22(목)) | 전략사업장회의(6/11(수)) 사무처장단회의(6/12) 투본회의(6/19(목)) 임시대의원대회(6/19) | |
| 정책기획 | 18대국회 입법안 마련팀 구성 및 운영 | - 대정부교섭 시작 - 사회공공성포럼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성의제 쟁점화) | - 6월 국회입법안 제출 : 쟁점 토론 지속 : 각 위원회별 면담 - 최저임금 교섭 | |
| 교육선전 | - 문화공연 | - 조합원및 대시민 선전전 | 조합원 및 대시민선전전 | |
| 비정규.조직 | - 현장대장정 시작 | - 지역활동가 워크숍 시작 - 미조직사업평가워크숍 | - 최저임금집회 - 비정규철폐결의대회 | |
| 혁신,직선제 | 직선제토론안 토론 혁신방침 관련 논의 | 직선제토론 지속 | | |

* 투본.중집은 매일 중순 목요일/그 전주 목 사무처장단회의/ 필요시 산별대표자회의

별첨2 - 6말7초 총력투쟁 성사를 위한 5~6월 홍보선전투쟁 계획

※ 4월 28일 산별대표자회의 결과와 5월 2일 투쟁본부 교선팀 회의 결과가 반영된 홍보선전계획

1. 조합원 선전물 제작, 배포

- 매체 종류 : 타블로이드 신문판 (4면 칼라)
- 인쇄 부수 : 30만부
- 편집 : 기획선전물처럼 이미지 요소를 살려 편집
- 발행 일정 : 1회 5월19일(월) 노조 배포, 2회 6월 9일(월)
- 기획팀:공공운수,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언론노조, 금속노조, 전교조공동제작
- 배포 계획 :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는 자체 배포망으로 배포하고, 다른 산별연맹은 총연맹의 기준

배포망을 활용한다. 추가 배포비 지급

2. 시민 선전물 제작 제작, 배포

- 전단지 2회 발행 (5월말 1회, 6월 중순 1회) 각 20만부씩 총 40만부 배포
- 1호선 전동차 광고 : 400개 차량 3개월 : 800만원

3. 기타 선전물 비용

- 노동절 유인물 : 3,572,000원
- 마스코트 상징이미지 ; 210만원
- 슬로건 공모 : 200만원

<6월말 7월초 공투본 선전계획>

| | 주제 | 인쇄부수 | 발행일 | 노조 도착 | 1차시안 | 배포 | 예산 | |
|------------|-------------|--------------|----------|-------|-----------|---------------|--------------------------------|------------|
| 조합원 | 1차/사회공공성 | 30만부 | 5.14 | 5.19 | 5.8 회의 제출 | 연맹, 총연맹 배포망활용 | 1600만원 (제작1150만원+ 발송 450만원) | |
| | 2차/산별교섭 | 30만부 | 6.3 | 6.9 | | | 1600만원 (제작1150만원+ 발송 450만원) | |
| 시민 | 전단지 | 1차 - 5말 | 20만부 | | | 5.20 | 지역 배포 | 700만원 |
| | | 2차 - 6말 | 20만부 | | | 6.17 | | 700만원 |
| | 전동차 광고 | 사회공공성 액자형 벽보 | 400개 차량량 | 5말-8말 | | 5.22일 | 1개차량 부착 18,000원 | 800만원 |
| | 노동절 전단지 | 사회공공성 | 5만부 | 이미 배포 | | | | 3,572,000원 |
| | 기타 | | | | | | | |
| 소계 | | | | | | | 57,572,000원 | |
| 캐릭터 상징 이미지 | 5월 중순 까지 | 210만원 | | | | | 210만원 | |
| 공동슬로건 공모 | 5월20일까지 | 200만원 | | | | | 200만원 | |
| 기타 | | | | | | | | |
| 합계 | 61,572,000원 | | | | | | | |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민주노총 당면 대응 계획>

1. 한미간 합의 요약

-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 척추뼈·뇌·눈 등 5개 수입 허용
- 미국이 동물성 사료정책 강화를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중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 허용
-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쪽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해 그 결과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 하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에만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

2. 합의사항 주요 문제점

1. 미국 내 도축소의 나이 감별률이 미미하여 30개월이라는 기준이 무용한 것임
 - 농림부 보고서, 미국내 전체 사육두수 중 나이 감별 가능율 최고 20% 정도
2. 30개월 이상 소 수입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물사료조치 강화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미 축산업계의 이행여부도 불확실하여 광우병 발병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를 강제하기 어려움
 - 미국의 불안정한 검역체계의 극복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
3.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권한이 없고,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국가’ 로 판결될 때만 수입중단할 수 있음
 - 광우병 발병 시, 미국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 최종판단될 때까지 한국은 미국소 수입과 검역 지속 의무

3. 실질적 수입까지 필요한 절차

- 한국 농림부장관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5월15일 고시 예정)
- 미국 식품의약국 동물사료조치 강화 시행
(6월초 30개월이상 수입 가능한 일정 내 시행 예정)

※ 현행법상, 위의 조치가 이행되면 자동적으로 수입과 검역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최대한 알려내어

구체적인 압박전술 결합 필요

2. 대응 현황

1) 자발적 반대운동 확대

- 청소년, 학부모, 소비자 등 자발적 반대운동의 급속한 확대 양상
- 온라인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이 이명박 탄핵운동으로 확산 (수일만에 '2MB탄핵서명 100만 돌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
- 온라인반대운동에서 오프라인 촛불시위로 확대 (5월 2일, 2만 / 5월 3일, 2만5천 / 5월6일부터 국회 감시 촛불시위 / 부산 등 지역으로 촛불시위 확산 추세)

2) 한미FTA범국본 등 시민사회진영 대응 추이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구성

- 5월 6일, 14시,프레스센터, '국민대책회의 구성을 위한 비상회의를 통해 구성
- 참가범위 : 제 정당, 사회단체, 네티즌 단위 1,500개 이상 참가

(2) 국민대책회의 4대 공동요구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국민행동 기조

- 국민참여 촛불문화제 개최
- 대규모 집회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선언(서명) 전개
-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 추진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하역.유통 저지 투쟁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캠페인
- 각 지역, 부문별 대책회의 구성

3)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응 동향

- 운수노조 : 미국산쇠고기 항만출하저지투쟁 전개 발표
- 금속 : 각 지부지회별 성명서 발표, 현수막 설치, 포스터, 노보특보 발간
- 전교조 : 경향신문 광고(학교급식퇴출), 각 학교별 교장에게 수입쇠고기 급식 사용여부 입장 공개 요구, 대국민 10만부 선전물 배포투쟁 등
- ※ 추가 취합 예정

4) 정치권 대응 동향

(1) 정부, 한나라당

- 5월 2일 촛불문화제 이후부터 당정대책회의 개최 등 여론 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당정간 협의의 결과로 '일본 등 타국의 쇠고기협상 결과에 따라 불리하게 체결된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재협상'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정부당국자가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는 등 당정간 불일치 현상 표출되고 있음
- 전교조 배후조종설 등 촛불문화제 불온화 선전을 강화하여 촛불확산을 막고자 하고 있으며, 이후 이런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임
- 5월 8일,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협에 처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타국 협상과정을 보며 새로운 상황 발생 시 협정개정 요구' 입장
 - :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회에 대한 엄중대처' 강조
- 미국정부가 이례적으로 휴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쇠고기 안전성' 홍보에 나서고 있음

(2) 민주노동당 및 야당

- 민주노동당은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하며, 협상무효화와 농림부장관 등 협상책임자 처벌 등 공동요구를 관철을 위한 국회내투쟁과 국민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적 수입반대운동 확산을 목표로 한 투쟁기조 수립
- 통합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입장
- 선진자유당, 친박연대(박근혜)는 무효화 특별법 추진 반대, 재협상 추진 입장
- 5월 8일,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합의문 발표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 통과
 - : 5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촉구 및 정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 5월 7일, 청문회 결과, 국정조사 실시
 - : 통상부분에 대한 책임 관련, 통외통위 13~14일간 청문회 이후 논의하여 처리-

3. 민주노총 대응기조와 당면 투쟁계획안

1. 대응기조

- 광우병쇠고기 반대운동을 통해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의 수위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명박식 일방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전선 확대의 촉매제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
- 80만조합원과 자녀, 가족들을 비롯한 1천6백만 노동자의 건강주권 확보 투쟁
- 시민사회, 네티즌들과 연대하여 국민 건강권 팔아먹은 굴욕적 조공협상 무효화와 이명박정권 규탄 및 책임자 처벌 투쟁
- 한미쇠고기협상의 불평등성과 한미FTA의 불평등성을 결합하여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로 발전시키는 투쟁
- 촛불문화제 참가 등에 대한 당국의 불법탄압에 대한 규탄저지투쟁과 중고생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투쟁
- 5~6월 국민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 전개와 6말7초 총력투쟁과 결합

2. 당면 투쟁

1) 투쟁 방침

(1) 기본방침

- 국민대책회의 적극 참가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한 한미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등 공동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함
-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은 전조합원 투쟁방침을 확정, 배포하고 80만조합원을 한미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함
- 촛불문화제 확산을 기본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중적 반대운동에 실천적으로 결합함
- 조합원이 있는 현장에서의 수입반대운동을 모색, 실천함

(2) 조합원 실천지침

- ① 전조합원은 모든 광역, 시군 촛불문화제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광우병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위해 중고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촛불문화제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되게 하고, 국민의 한사람, 부모의 한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촛불문화제 자유발언 등 프로그램에 적극 결합한다.
- ③ ‘광우병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실현을 위한 노동현장 광우병쇠고기 퇴출 운동’ 등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방침을 적극 실천한다.
- ④ 각조직과 개인들의 활동소식과 경험담을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네티즌들과 연대하여 온라인 공동행동을 적극 전개한다.
(민주노총홈페이지(www.nodong.org), 광우병투쟁홈페이지(www.antimadcow.org) 등)

2) 투쟁 계획

(1) 범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대중투쟁 전개

- 참고자료 참조

- ① 민주노총 ‘광우병쇠고기 대책팀 구성’ 및 지역별 범시민대책위 참가, 조직
- ② 전국적 차원으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가 및 조직
 - 5월 9일을 비롯한 국민대책회의 차원의 집중 촛불문화제에 조합원 참가
 - 정세와 구체적 계기와 결합하여 민주노총이나 산별연맹 독자 촛불문화제 개최
 - 5월, 16개 지역본부, 전국동시다발 촛불시위 적극 참가 및 조직
- ③ 대국회 요구 투쟁
 -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금지 특별법, 통상절차법 마련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 운동
 - 6월 국회, ‘통상절차법’ 또는 쇠고기특별법 입법 투쟁
- ④ 자발적 촛불시위 참가 중고생들에 대한 정부 탄압에 대한 적극적 보호 투쟁
 - 각종의 정부 탄압 발생 시, 적극적 규탄투쟁 전개
 - 중고생 보호와 지지를 위한 전조합원 촛불문화제 참가 조직 등

(2)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를 위한 노동현장 광우병쇠고기 퇴출 운동(가)’ 안

- 산별연맹의 특성에 입각한 구체 퇴출운동 계획 취합하여 최종 정리 예정

- ① 민주노총 소속 모든 현장 식재료에 광우병 쇠고기 퇴출 투쟁(노사 미국쇠고기 불사용 협약 체결 투쟁)
 - 2008년 단협 요구안에 ‘긴급 요구’로 포함하여 노사간 미국산쇠고기 불사용 협약 쟁취
 - 현장 내 광우병 쇠고기 퇴출 캠페인, 식당 광우병 포스터 도배하기 등 조합원 홍보 결합

※ 민주노총 현장부터 시작하여 모든 노동현장으로 확대 목표
- ② 80만조합원 자녀와 가족, 미국산쇠고기 퇴출 투쟁
 - 민주노총 전 단위사업장 노조, 전조합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가정통신문’ 발송
 -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하여 조합원 자녀 학교 급식조사 및 학교사업 전개
- ③ 조합원 자녀 학교 급식에 미국산쇠고기 퇴출 투쟁
 - 전교조, 학부모단체, 학부모조합원 등이 결합하여 ‘학교 급식 집중감시운동선포’ 및 학교당국 강제
- ④ 보건의료노조, 병원 환자 급식에 미국산쇠고기 퇴출투쟁
 - 보건의료노조 단협투쟁과 결합하여 광우병 쇠고기 불사용 협약 쟁취
 - 모든 환자 가족들에게 광우병쇠고기 위험성 홍보
- ⑤ 온라인 미국산쇠고기 퇴출 투쟁

- IT연맹, 진보진영 온라인운동단위 등이 연계하여 청와대와 관련 부처, 미백악관과 관련부처 사이트에 대한 집중 항의와 무효화 요구투쟁 전개
- 광우병 반대 온라인 네티즌 운동과 결합 (“미친소 페러디 공모사업” 등)
-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적극 홍보
- ※ 이후 ‘교육, 의료, 식량, 물가, (주택)’ 등 5대 국민의제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투쟁거점 마련과 온라인 연대운동 추진

3) 홍보선전 계획

- (1) 별도 홈페이지 개설(하반기까지 내다보고 ‘5대 국민운동과제’ 중심의 홈페이지 제작)
- (2) 광우병쇠고기 안전지대 상징물 배포(현장용, 조합원 집대문부착용 등)
- (3) 조합원 선전홍보물(범국본 등 제작되어 있는 것 적극 활용)
- (4) 총연맹배포 ‘광우병 교육선전지’, ‘PD수첩’ 등 동영상을 활용하여 점심시간 등 교육,선전
- (5) 학교, 병원 등 홍보대상의 특성에 맞는 홍보물
- (6) 민주노총 ‘노동현장 5대 광우병쇠고기 퇴출운동’ 집행현황 단계별 집계, 언론화를 통한 실질적 압박 입증 등

[참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국민행동계획’

1. 4대 요구사항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국민행동 방안 / 계획

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 선언(서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4대 요구사항 중심 서명운동 전개
- 네티즌, 학부모, 청소년, 지역주민 등 각 계 각 층의 선언
- 청와대, 국회에 서명운동 결과 제출
- 모금운동 병행 (모금운동 공식계좌)

②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

- 5월 6일(화)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서울 청계광장)
- 5월 7일(수)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 9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16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그 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촛불 문화제 개최일정 검토
- 5월 22일 또는 23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국회 앞)

③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식당, 병원, 사내식당 등 대형 급식소에서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 운동 추진
- 이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 선언 참여운동 조직, 확대
- 광우병 쇠고기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홍보 사이트 개설 및 지역별.전국적인 지도 작성(mapping)
- 가정,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제조업 등으로 안전지대 선포 운동 확대
-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 상징물(스티커) 제작.부착

④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 추진

- 5월 임시국회 내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의견 제출
- 각 당 면담 추진 및 특별법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서명 추진
- 특별법 입법추진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추진

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하역.유통 저지 추진

- 미국산 쇠고기 최초 선적분이 도착하는 5월 중 도착항만을 중심으로 하역,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 전개
- 항운노조, 운수노조, 지역단체 등 협력을 통해 하역, 유통 봉쇄에 모든 역량 결집

⑥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캠페인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광우병 잡는 날”
- 전국 각지 동시다발 진행
- 광우병안전지침(가이드) 배포

⑦ “광우병 국민박사” 한 말씀

- 청와대, 농림부 홈페이지 항의방문, 의견달기
- 5월 14일 수입위생조건 변경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개진 운동 전개

⑧ 각 지역, 부문별로 대책회의 구성

- 각 지역별, 부문별 대책회의 구성 및 활동
- 지역, 부문 사정에 맞는 맞춤형 실천방안 모색, 추진



혁신과 재창당방안 토론회자료

2008년 5월 9일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혁신 재창당 방안(토론안)

이수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I. 왜 혁신-재창당이 필요한가

1. 주체적 필요성

1) 10년의 평가와 반성

○ 원내 진출 4년 만에 당은 두 조각이 나고 의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진보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척박한 현실에서 창당 4년 만에 1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일약 한국 정치의 신데렐라가 되어 승승장구하던 민주노동당이 이제 자신의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짧게는 원내 진출 이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당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대선 이후 분당 사태에 대한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민승리 21 이후 10년 간의 진보정당운동의 총체적 결과이자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인 것이다.

○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당 활동과 진보운동 전반을 살펴보면서 당의 이념과 노선, 조직 체계, 활동방식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은 없는 지 ‘강령’에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평가와 반성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진보정당운동을 열어가야 한다.

2) 침체와 조직적 이완

○ 대선 패배와 이어진 분당 사태 이후 지난 총선을 거치며 최악의 위기적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해 있고 당원들은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 당 내에 생산적인 논쟁이 사라졌고, 지금도 탈당하는 당원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아 있는 다수의 당원들도 당을 방관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과 결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

○ 더구나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민주노총의 단위 노조 현장에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당의 조직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3) 2개의 진보정당

○ 지난 총선의 결과는 절반의 승리이자 절반의 패배이다. 대선 패배와 분당 사태를 딛고 지역구 2석과 비례 3석을 건진 것은 그 자체로 선전한 것이지만, 의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보다 현저히 약화된 것은 분명한 패배이다.

○ 그런데 이번 총선을 거치며 이 땅에 두 개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진보적 의제와 진보적 활동을 민주노동당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정책이든 조직이든 철저히 경쟁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총선의 결과가 ‘단기적 안도’와 함께 장기적 우려’를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경쟁 체제의 일차적 결과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분열의 고착화든 재 통합이든 모든 것은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재도약으로 가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적 질서와 언론의 홀대를 뚫고 정권과 자본 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부의 경쟁자와도 싸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다.

2. 객관적 필요성

1)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

○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하며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초기의 신선한 이미지는 이내 실망감으로 이제는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운동권정당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대안 없이 주장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진보신당의 창당 이후에는 민주노동당-낡은 진보, 진보신당-새로운

진보로 인식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한 꺼풀 더 칠해져 있는 것이다.

○ 물론 이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반대 세력의 정치적 음해일 수도 있고 보수 언론의 중상모략일 수도 있다. 또 언론의 의도적인 진보신당 띄워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 부분 당의 잘못된 사업방식이나 관행 때문에 빚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갈수록 확산되고 고착화 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적인 혁신과 재창당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2) 보수 양당제의 고착화

○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보수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화는 일시적인 보수화나 반사적인 보수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바탕으로 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단체가 함께 하는 범 보수진영의 체계적인 보수화, 조직적인 보수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보수화는 노무현 정권의 퇴장과 386 정치인들의 몰락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동반 보수화를 불려와 정치지형 전체를 보수화시켜 보수 양당제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보수양당제가 고착화 되면 정치지형은 보수-중도-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보수 양당제 하에 진보가 구색으로 존재하는 소위 '진보정당 없는 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불리한 지형을 뚫고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 이명박 정권의 반동화

○ 사회 전반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화두로 '실용'을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본질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남국관계의 경색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자율화계획 발표, 금산분리 완화 추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압박, 민간의료보험 도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반 민족적이고 반 민주적이며 친 자본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신주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 시민사회 세력도 예전만큼 위력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급격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처럼 이미 범 국민적인 반대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진보세력에게 ‘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정세 반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II . 어떻게 혁신-재창당 할 것인가

1. 새로운 진보 ! 21세기 진보 !

1) 10년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 민주노동당의 역사와 정신은 계승하고 가치와 원칙은 견지하되, 20세기적 낡은 사고와 관행, 잘못된 사업 방식과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인 평가나 사안별 평가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당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당원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평가’와 함께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21세기 진보의 재구성

○ 다음으로 ‘진보의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관철하고자 했던 기존의 진보적 가치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 하면서, 자주와 평등의 가치에 여성, 환경, 생태, 소수자 등의 21세기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노력을 통해 ‘낡은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 ‘20세기 진보’가 아니라 ‘21세기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3) 혁신적이며 유능한 진보정당

○ 아울러 ‘열린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의체계에 대한 부문과 세대의 할당을 확대하고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당의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전당대회와 국민정책자문단 등을 통해 정책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중앙과 지역의 모든 사업의 최 우선을 민생정치활동에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쇠하고 폐쇄적이며 무능한 진보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유능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

이다.

4) 문화적이며 창조적인 진보정당

○ 마지막으로 무겁고 딱딱한 당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문화전략’을 구사하며 ‘창조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즐겁고 신나는 진보정당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당문화 개선운동을 펼치고, 문화사업단을 설립해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책을 문화활동과 결합시켜 국민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듣는 ‘정치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당원-지역-국민 중심으로 !

1) 당원이 앞장서

○ 혁신과 재창당의 주체는 당원이다. 가뜰이나 당원들의 당과의 결합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원을 당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면화 해야 한다. 혁신 재창당 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분회를 활성화 시켜 당 활동에 당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정치 교육을 통해 당원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2) 지역을 중심으로

○ 당의 중심은 지역이다.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당을 주민 속에 심어갈 수 있는 기제는 지역조직이다. 전 당적인 조직 체계를 광역 시,도당 중심으로 재편하되 지역위원회를 ‘당원관리조직’이 아니라 ‘주민활동조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민 속으로

○ 대국민 정치활동은 민주노동당의 생존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회의의 1번 안건을 정치적 현안문제로 다루고,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당 사업의 최 우선순위를 대국민정치활동에 두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중앙당은 전 당적인 대 국민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의 조건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며, 지역에서는 매주 하루 ‘주민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여 전 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3. 2010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

1) 도약과 침체의 기로

○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다시금 도약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운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이다. 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약진한다면 이어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진보정당의 집권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노동당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진보신당과의 경쟁

○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진보신당이 2010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은 필지의 사실이고, 많은 선거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진보신당 후보와 경합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보수 정당 후보 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상대 후보에 맞서서도 승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전면 혁신, 전면 재창당

○ 따라서 2010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은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재창당하는 길 밖에 없다. 2010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는 2년간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조직 체계, 사업 방식, 정치 활동 등 당 전반을 정비하면서, 2010년까지의 단계적인 재창당을 통해 2010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4) ‘10-100-1000 프로젝트’

○ 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2010 TF팀’을 구성하고 ‘2010 10-100-1000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즉, 수도권과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후보군 10인을 2008년 말부터 발굴 육성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군 100인을 2008년 말까지 발굴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고, 기초의원 후보군 1000명을 2008년 말까지 발굴하여 2009년부터 실질적인 후보활동에 돌입하게 하는 것이다.

Ⅲ. 무엇을 혁신-재창당 할 것인가

1. 조직 혁신

방향

- 중앙지도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효율적인 의결기구, 강력한 집행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역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1. 의결기구

1. 대의원대회

1) 쟁점

- 당대회의 성격 및 역할은 무엇인가?
- 대의원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 지역위원회별 선출 방식을 광역시.도당, 추첨제 등으로 바꿀 것인가?
- 노.농할당을 축소하고 부문할당을 확대할 수 있는가?

2) 혁신방안

- 2년에 한번은 정책당대회(홀수년 5월)로 전환한다.
- 예산심의권을 중앙위원회로 이관한다.
- 대의원 규모는 현재(60명당 1명)대로 한다.
- 선출단위를 현 지역위원회에서 광역시.도당 위원회로 변경한다.
- 대의원의 30%를 추첨으로 선출한다. 지역(광역)과 부문(노.농)별로 대의원의 30%는 신청하는 당원중에서 추첨하는 방식.
- 부문 할당 조정을 논의한다.

※ 쟁점 해설

-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중앙위원회로 이관하고, 대신 정책을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는 2박3일간의 대의원대회로 전환한다.
-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싶으나 조직력이 취약하여 당선이 어려운 당원을 위해 총원의 30%를 추첨으로 선출한다. 신청하는 당원중에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2. 중앙위원회

1) 쟁점

-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 선출 단위를 조정한다.
- 선출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 문제를 논의한다.

2) 혁신방안

- 중앙위원 수를 200여명으로 한정한다.(현행 200명당 1명)
- 최고위원과 의원단, 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배정한다.
- 선출단위를 지역위원회에서 광역시·도당으로 변경한다.
- 지역과 노·농 중앙위원의 30%를 추천제로 선출한다.
- 다양한 부문과 세대가 참여하는 할당제를 논의한다.

※ 쟁점 해설

- 중앙위원의 규모를 200명으로 한정하고 예산·결산 심의 등 기능을 강화한다.
- 선출단위를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도당으로 변경하고, 30% 추천제를 실시한다.

2. 지도체계

1) 쟁점

- 지도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당론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하는 의사결정구조는 무엇인가?
- 최고위원회 체도를 유지할 것인가,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 지도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무총장은 대표와 런닝메이트제로 선출할 것인가, 대표가 임명할 것인가?
- 노·농할당을 유지할 것인가?

2) 혁신방안

① 최고위원제 유지

- 대표 선출
- 신속한 결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규모를 줄인다.
-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가 승인한다.

② 단일지도체제로 전환

- 대표와 부대표 선출
-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을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에서 승인한다.

※ 쟁점 해설

- 최고위원제는 다양한 의견그룹이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여 논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 단일지도체계는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과 효율적인 집행이 보장된다. 신속한 집행과 그에 따른 책임성이 분명하므로 적은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 사무총장은 임면제로 하되, 선출된 지도부 중에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도부 규모와도 연동된다.
- 지도부의 규모를 줄일경우 여성할당, 노.농할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3. 집행체계

1) 쟁점

- 중앙당에서 강화해야 할 부서는?
- 집행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과제별, 부문별 위원회제도의 효율적인 변화는?

2) 혁신방안

- 중앙당 사무총국을 축소하고 전략기획, 정책, 언론홍보를 강화한다.
- 기획단위 통합 : 사업기획, 정책기획, 의정기획을 통합하여 전략기획실 설치.
-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의 통일적 운영과 정책 네트워크 강화
- 예비 상임위 제도 : 의원배치 상임위 외에 예비상임위 제도를 설치하고,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통외통위, 건교위, 문광위, 법사위, 행자위 등)
- 중앙 집행 구조 개선
- 중앙과 전국의 효율적 집행 구조 : 확대간부회의 기능 강화 등
- 지도부와 의원단의 정례회의

※ 쟁점 해설

- 지도부의 지도방침이 중앙과 지역까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적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확산회의를 개선한다.
- 중앙은 전략기획, 언론홍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 그룹(연구소)과 현장 전문가를 당으로 조직한다.
- 예비상임위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과제별, 부문위원회를 조정한다.

4. 지역조직체계 및 운영 방안

1) 쟁점

- 정당법에 의해 사무실과 상근자를 둘 수 없고, 당원협의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무실과 상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 및 상근하는 간부의 사업비 확보 문제는?
- 지역에서 당원사업 및 지역정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 당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분회 활성화인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인가?

2) 혁신방안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중심의 운영체계가 기본이고, 지역위원회는 당원협의회로 전환하며, 당원협의회는 광역시.도당에서 사업 및 운영을 총괄한다.
- 당원협의회는 지역별 특성(도시형, 농촌형, 공단형)에 맞게 운영한다.
- 당원은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지역조직은 회원과 지지자 등을 조직할 수 있다.
- 당원협의회의 사업비 지출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한다.(교육, 분회활동, 주민활동 등)
- 지역내 노동조합과 농민회 등 지지조직과는 반드시 활동을 공유한다.
-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 모임을 조직하고 당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 분회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쟁점 해설

- 지역위원회는 당원협의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방식과 공간을 활용한다.
- 상근자의 인건비 없어지고, 사업비만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비 매뉴얼에 맞게 운영한다.
- 분회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당을 지지한 단체(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회)와는 반드시 일상활동을 공유한다.
- 당원들이 당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하며, 의무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5. 의정지원체계

1) 쟁점

- 입법활동과 지역정치활동, 대중투쟁과의 결합 방법은?
- 의정활동을 전당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은?
- 당과 원내 활동의 긴밀한 연계 방법은?

2) 혁신방안

- 원내활동은 당과 협의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대중투쟁과 결합한다.
- 의원단은 당원과 지역, 노동조합 등에 의정보고서를 정례화한다.
- 전략기획실과 정책실을 의정지원단에 파견하여 의정활동과 당사업을 일치시킨다.

※ 쟁점 해설

- 의정활동이 당과 지역, 노동조합에 알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당원과 지역, 현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 5명의 의원으로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당과 협의하여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대중투쟁과 결합한다.
- 의정지원단에 전략기획실과 정책실이 파견되어 사업이 공유되어야 한다.

6. 할당제도

1) 쟁점

- 노동, 농민 부문의 할당을 일부 조정하여 다양한 부문과 세대에 할당을 확대할 수 있는가?

2) 혁신방안

- 노동, 농민 할당 제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다.

※ 쟁점 해설

- 현재의 할당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존재하나, 민주노동당과 지지단체와의 올바른 정치적 관계와 발전 경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므로 차기 지도부에서 보다 심층적 준비와 논의 속에 개정안을 마련한다.

7. 당직.공직 선출 방안

1) 쟁점

- 당의 지지기반을 노동자, 농민, 지지자들에게 확고히 뿌리내린다.
- 당직, 공직자 선출시 후원당원, 지지자, 지지단체 회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 당비를 내지 못한 비당권자에게 사면 복권의 기회를 준다.
- 개방형, 민중참여 경선제를 도입한다.

2) 혁신방안

- 당직은 진성당원제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민중참여 경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직선거에는 지역에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한다.

※ 쟁점 해설

- 당직 지도부 선거에 개방형(민중참여형) 경선제를 도입하여 민중과 당과의 정치적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당원 확대를 위한 토대 정치사업화 한다.
- 공직선거에서 지역의 지지단체와 후원당원, 지지자 등이 당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 방식의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여 당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해 나간다

2. 정치활동 혁신

1) 전략적 지지층 강화

<초점>

- 분당으로 인해 배타적 지지가 이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농 회원과의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 지역위원회와 분회를 다시금 당의 주체로 세운다

<혁신 방안>

1. 3대 경선 프로젝트
 - 2008년 당대표 민중참여경선제
 - 2010년 시도지사후보 주민참여경선제
 - 2012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경선제 실시
2. 현장 당원협의회 신설
 - 일정 규모의 당원이 있는 노동 현장
 - 권한과 책임 부여, 재정 지원
3. 특단의 비정규직 대책 마련
 -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사회연대전략 추진
 - * 연대임금정책, 단협 효력 확장, 원하청이윤공유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4. 중소기업·세상공인 부문 할당

<쟁점 해설>

1. 2008년 당직 선거 민중경선제 도입에 대하여

<찬성> 분당 사태 이후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반대가 노골화 되면서 노동자 농민 등 당의 전략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과 민주노총, 전농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위기를 공세적으로 돌파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긴 하나 당과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농 회원들의 관계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또 새 지도부 선출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2. 사회연대전략에 대하여

<찬성> 지금처럼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려 있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사회연대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큰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정권과 자본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동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될 있다.

<반대> 연대임금전략은 노동자 임금양보론이고 정권과 자본이 담당해야 할 몫을 같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끼리 나눠먹기”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연대전략은 노사정 대타협 모델과 다르지 않으며 계급분열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2) 대국민 정치활동 혁신

<초점>

- 모든 주요 회의에서 국민적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대국민 정치활동에 둔다
- 정치적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통해 대국민 정치활동의 전형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모든 회의 안건 1번은 ‘정치 현안’으로 채택
2. 매주 토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날’ 실천
 -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 사업 전개
3. 지역정치활동 매뉴얼 개발
 - 공단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4. 민생정치 공동실천

- 중앙, 지역 차원에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 당-진보연대-민주노총-전농-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3) 의정활동 혁신

<초점>

- 의회주의, 합법주의, 개인주의 등 잘못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불식한다
- 원내활동과 대중운동을 결합시켜 ‘거대한 소수전략’을 추구하되 의정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한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 진보적인 지방정치의 모범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당 중심의 통합적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 연간 10대 핵심과제 선정
 - 원내기획실, 정책기획실, 당기획실 등 3원화 된 기획력을 당 기획조정실로 통합
2. 국회의원 중간평가제와 소환제 도입
 -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정활동 평가위원회’ 구성
3. 의정활동과 지역정치 결합
 -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례협의회’ 강화
 - 비례의원 담당 지역 선정
4. ‘예비상임위원회’ 설치
 - 원내 의원 5명의 상임위 만이 아니라 전 상임위를 대상으로 구성
5. 전략적 지방정치 거점 선정과 지원
 - 시,도당 차원에서 ‘예비 상임위원회’ 구성
 - 생활의제, 지역의제, 사회의제 등 ‘의제’ 해결 능력 제고
 - 당, 노조 차원의 다양한 지역 개입 전략 구사

<쟁점 해설>

1. ‘예비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찬성> 원내 의원이 5명에 불과한 민주노동당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새도우 캐비닛(예비 내각) 형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전직 의원이나 낙선 비례의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 그동안 과제별 상설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집행체계와 중복되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와 같은 문제를 또다시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앙당을 슬립화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혁신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4) 민생정치 혁신

<초점>

- 비정규직, 교육, 주택, 의료 등 그동안 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전략적 민생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다수의 서민대중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생 과제에 전략적으로 집중한다
- 사안별로 일어나는 민생 현안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
- 모든 지역위원회의 활동의 중심을 ‘당원관리’에서 ‘주민사업’으로 전환한다

<혁신 방안>

1. 전략적 민생과제 법제화
 - 1가주 1주택 법제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등
2. ‘민생 SOS 본부’ 설치
 - 학생 폭력, 보험 분쟁, 의료 사고, 사법 피해, 아토피 등 10대 과제
 - 중앙당, 시도당에 모두 설치
 - 지역은 중앙당 10대 과제에 지역 과제 결합
 -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와 결합
 - 민생종합상담실, 민생기동단, 이동 당사 운영
3. 매주 토요일 ‘주민과 함께하는 날’ 실천
 -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 사업 전개

5) 평화통일전략 혁신

<초점>

- 1회성 교류 사업을 지양하고 통일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 시대를 예비하는 교류사업에 집중한다
- 한미동맹 강화를 공공연히 외치며 미사일방어체계(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공연히 외치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독자적인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다
- 친북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평화 통일 운동 방안을 개발하고 전형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평화협정 체결 추진
 - 평화협정 체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전 제시
 - 형화협정 시안 마련과 국민적 합의 추진
2. 한미동맹 폐기 추진
 - 침략전쟁 파병 금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동북아 평화지대화 추진
3.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교류와 협력 추진
 - 남북 정당간의 정치 교류 추진
 - 재생에너지 지원, 친환경 농업 협력 등
4.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쟁점 해설>

1. 분단으로 인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찬성>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관계 없이 친북당이라는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를 덮어두고 쉬 쉬 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하여 당의 주체적인 입장과 대응방침을 밝히는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혁신 재창당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반대>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에 의한 인권공세는 불확실한 인권문제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인권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남북관계 발전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6) 정책 정당 실현

<초점>

- 중앙당 정책역량은 실질화 하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생산과 정책연대에 주력한다
-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의 통합을 검토한다
-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공부하는 정당의 모범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정책 당대회 개최
 - 2년에 1회, 홀수 년 5월
2. 단일 정책연구단위 구성
 -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 통합 검토
3. ‘국민정책네트워크’ 구축
 - 개별 국민, 연구단체, 연구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
 -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방식의 온라인 정책제안
 - 산하에 ‘국민정책자문단’ 구성
 - 각 의제별로 국민의 직접 행동 조직 및 지원
4. ‘주정야독(晝政夜讀)’ 캠페인
 - 중앙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린정책포럼 개최
 - 매주 토요일 저녁 전 지역위원회 간부 학습의 날
 - 지역간부 년 2회 정책 연수 의무화

7) e-Party(전자정당) 구현

<초점>

- 웹 2.0 시대에 걸맞은 정당 시스템을 구축한다
- 온라인으로 당원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의 전형을 창출한다

<혁신 방안>

1. 모바일투표제 도입
2. 온라인 ‘정책제안방’ 개설
3. e-Learning 시스템 구축

8) 당 문화 혁신

<초점>

- ‘무겁고’ ‘무섭고’ ‘엄숙한’ 것이 아니라 ‘신나고’ ‘즐겁고’ ‘유쾌한’ 진보 정당의 문화와 기풍을 진작시킨다
- 다양한 기획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진보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간다

<혁신 방안>

1. 문화사업단 설립
 -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정책을 음악, 춤,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
2. 문화 프로젝트 추진
 - 일명 ‘마이클 무어 프로젝트’ 추진
3. 정치축제
 - 만민공동회 형식 + 문화적 축제
 - 교육, 물가, 부동산 등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당 사업에 반영

9) 당원의 정치의식 고양

<초점>

- 당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당 활동에 적극 나서게 하고, 정파적 중심성이 아니라 당적 중심성을 갖도록 한다
- 당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역량을 육성한다
- 당 내외 역량을 총 망라하여 당원 교육에 진력한다
- 21세기의 시대적 조건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혁신 방안>

1. 의무교육제 도입
 - 당직, 공직 후보자 의무교육과정 이수
2. ‘1020 정치학교’ 프로젝트
 - 고등학생을 10대 지도자로 육성하여 2-3년 후 대학에 진학하여 당 학생위원회의 중추로 활동하게 함
 - 대학생과 20대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여 차세대 당 지도자로 키움
3. 수준 높은 교재 개발

- 미래 비전, 시대 과제, 현안 문제 등 교안 개발
- 4. ‘교육전문위원’ 위촉
 - 당 내외 전문가로 위촉
- 5. e-Learning 시스템 구축
 - 중앙연수원이 교안, 프로그램 개발

3. 미래 비전 제시

1) 이념과 노선 재정립

<초점>

-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노선을 21세기적 상황과 조건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 사회 변화와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념과 노선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과 새롭게 보완할 부분을 제시한다
- 애매모호하거나 복합적으로 표현된 강령적 내용들을 보다 명료하게 재정리하고 수정 보완한다

<혁신 방안>

1. 강령 개정 추진
 - 1차 정책당대회에서 추진
 - 당 대회 전에 전 당적 ‘강령토론회’ 진행
2. 국가 비전 제시
 - 민주노동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상
 - 이념적 토대,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체제 구체화

2) 집권전략 제시

<초점>

-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국가의 상과 변혁의 내용을 제시한다
- 집권에 이르는 경로와 방식을 제시한다

<혁신 방안>

1. 집권 전략 제시
 - 집권전략위원회의 기존 안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2. 집권 로드맵 제시
 - 2010 지방선거, 2012 총선과 대선 등

3) 재창당 방안 제시

<초점>

- 재창당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국민과 함께하는 재창당의 원칙을 수립한다

<혁신 방안>

1. 단계적 재창당
 - 1단계 : 2008년 말까지
 - 2단계 :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2. 동시적 재창당
 - 내부 혁신 : 조직 혁신, 정치 활동 혁신, 미래 비전 제시
 - 외연 확대 : 중앙, 지역, 부문 등
3. 아래로부터의 재창당
 - 전 지역위원회 산하에 재창당위원회 구성

4) 21세기 노동전략 마련

<초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 전략을 구사한다
- 당과 민주노총이 동반하락이 아닌 동반성장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구사한다
- 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주도적으로 21세기 노동전략을 만들어간다

<혁신 방안>

1.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전략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 집권전략 논의
 - 공동의 계급적 의제와 지역적 의제 발굴
 - 전국적 공동투쟁과 연대투쟁 전략 개발
2. 사회연대전략 검토
 - 연대임금 전략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단협 효력 확장 / 원하청 이윤공유제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3. 당-노총 관계 재정립
 - 원내 진출 시기의 당-노총 관계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 영국, 스웨덴 / 브라질, 남아공 등 사례 연구

5) 전방위적 연대전략 구사

<초점>

-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전선 구축과 시민단체와의 사안별 연대, 아나가 국제연대를 추진한다
- 진보대연합의 성과가 재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혁신 방안>

1. 10대 민생의제별 연대기구 구성
2. 기타 사안별 연대기구 구성
3. 국제연대 추진
 - 전직 외교관 등 전문 역량 충원
4. 공동실천, 정책연대, 정책연합, 재창당 등 대상에 따라 연대의 수위 조절

6) 당내 민주주의 실현

<초점>

- 정파적 폐해를 극복하고 당 중심성을 회복한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사, 선거 등에서의 패권주의를 극복해 나간다

<혁신 방안>

1. 개방형경선제 도입
 - 공직은 의무적으로, 당직은 상황에 따라
2. 부문별, 세대별 할당 강화
 - 지역과 부문, 세대를 1:1로 할당
3. 정파등록제 실시 검토
4. 인사위원회 설치

<쟁점 해설>

1. 패권주의에 대하여

그동안 당직 공직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소위 ‘세팅 선거’,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등 당내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양태는 2004년 원내 진출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 후 더 심해졌으며,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번 혁신 재창당 과정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패권주의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도록 해야 한다.

7) 대안적 미디어 전략

<초점>

-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방송, 신문, 출판 등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한다

<혁신 방안>

1. 영상 매체 전략
 - 독자적인 IP TV 개국 추진
2.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방송국’ 설립
 - 당과 배타적 지지단체, 진보적 언론단체가 협의체 구성
 - 100만명 국민청원운동
 - 일단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출발
3. 대중적 진보정론지 발간

- 주간 진노정치를 대중적 진보정론지로 발전시킴
 - 1단계 : 진보정치와 노동과 세계 통합
 - 2단계 : 대중적 진보정론지 창간
4. 출판 사업
- 역사 저작물 등

8) 당명 개정 검토

<초점>

- 단기적으로, 최근의 분당 상황에서 기존 당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판단과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당명의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 중,장기적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을 재정립하며 기존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에 여성, 생태, 환경, 소수자 등 새로운 21세기적 가치를 결합시킬 때 당명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